

5·18, 긴급조치 위반 등 과거사 바로잡기 2년째 직권 재심청구

광주지검, 억울한 누명 58건 벗겼다

잘못된 사법처리 적극 발굴  
국민들 억울함 풀기 앞장  
형사보상금 수령도 잇따라

광주지검이 주도해온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로 억울한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사건으로 억울하게 유죄선고를 받은 국민을 직접 구제하기 위해 2년째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0일 대검찰청 공안부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과거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487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재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유족은 물론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검사측이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 직

접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는 드물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재심청구는 검찰이 과거 민주화운동 등에 나섰다가 억울한 판결을 받은 국민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7년 8월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이 일부 과거사 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사과한 이후, 과거사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작업을 통해 억울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발굴하고 직권 재심청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의 직권 재심청구 사건은 긴급조치 위반 사건이 217건으로 가장 많으며, 1972년 계엄법 위반 사건 120건,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111건, 부마민주항쟁 사건 9건 등의 순이다. 현재까지 직권 재심청구된 사건 중 290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재심청구 사건

(111건)에선 현재까지 58건(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억울한 옥살이 등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받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검은 그동안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가 주축이 돼 5·18 재심청구를 위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당사자 또는 유족을 직접 만나 일일이 설명·설득하는 등 어려운 조사과정을 거쳤다. 재심청구를 위한 조사과정에서 대부분은 감사의 뜻을 나타냈으나, 가족이 5·18 당시 희생된 사실조차 모르거나 5·18에 대해 기억하기 싫다며 재심청구를 거부하는 유족도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광주지검은 이 과정에서 광주 관할이 아닌 39건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 검찰로 사건을 보내 재심청구 여부를 판단하도록 조치했다. 5·18관련 재심청구 대상은 5·18 당시 계엄사령부 산하 '전투교육사령부계엄보통군법회의'(군법회의)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재심 사유가 인정된 사건들이다. 이들 사건 당사자들은 1995년 5·18 특별법 제정 이후 재심 청구할 길이 열렸는데도 이를 알지 못해 무죄 판결을 받지 못했으며, 검찰은 이들을 직접 찾아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 같은 검찰의 노력으로 지난 4월에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년 7개월만에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난 '인권운동 대부' 고(故) 홍남순 변호사가 39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정수봉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5·18 사건으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재심을 받지 않은 111명(사망 36명)을 직접 발굴해 직권으로 재심 청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과거사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빠르면 오늘 경찰 고위직 인사

치안정감 4~5명 교체 전망  
광주·전남경찰청장도 주목

경찰 고위직 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르면 1일 치안정감 승진·전보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전남에선 치안감인 김규현 광주지방경찰청과 최관호 전남지방경찰청장이 이번 고위직 승진·전보 인사 대상이다. 경찰 고위직 인사는 6월 말로 예정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으로 전국에 비상령이 내려지면서 이번 주 초로 미뤄졌다. 이번 인사에서는 경찰 조직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계급인 치안정감을 비롯한 고위직 인사가 단행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 본청 차장과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모두 6명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들 모두 차기 청장 후보에 해당된다. 민청장이 취임한 이후 치안정감 인사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 있었다. 지난해 7월과 11월 인사에서는 각각 5명과 3명의 치안정감이 교체됐다. 이번 인사에선 치안정감 4~5명이 교체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찰 고위직 인사에는 입직 경로, 출신 지역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며, 현 치안정감 6명의 입직경로는 경찰대와 간부후보가 3명씩이다. 출신지역은 충청·영남 각 2명, 강원·호남 각 1명이다. 이번 치안정감 승진 후보자 중 호남출신으로는 대표적 '수사·형사통'으로 꼽히는 배용주(56·경찰대 2기) 경찰청 수사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치안정감에 이어 경찰 내 세 번째 고위직인 치안감 인사도 큰 폭으로 이뤄질 것으로 분석된다. 치안감은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를 뺀 나머지 13개 지방청장과 본청 국장급 계급이다. 이번 치안감 인사 폭은 역대급인 9~10명 선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댓글공작과 정보경찰의 불법 활동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치안감 4명이 직위해제됐기 때문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폭발사고 난 광양제철 점검  
위반사항 455건 적발  
고용부 여수지청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폭발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집중적으로 감독한 결과 위반사항 455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여수지청은 근로감독관 16명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12명 등 28명을 투입해 지난 17일부터 열흘간 안전보건 관리 상태와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45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221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의뢰했다. 또 167건에 대해 과태료 1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67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폭발사고가 발생한 포스넵(PosNEP·니켈 추출 설비) 공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이 지연됐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늦게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환경측정이 누락되는가 하면 특수검진 지연 등 안전보건 관리제도와 관리 상태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적인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기계나 기구의 회전부 방호상태가 불량하고 밀폐 공간 관리 누락 등이 확인됐다. 한편 광양제철소 내 포스넵 공정에서는 지난 1일 폭발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서모(62)씨가 숨지고 포스코 소속 김모(37)씨가 다쳤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



금요할매장터 "신선 농산물 팔아요" 지난 28일 광주시 남구 대지동 하촌마을 앞 공터에서 열린 금요할매장터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키운 야채와 곡물 등을 판매하고 있다.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금요할매장터는 오는 11월 29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문을 연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담양군, 메타세쿼이아길 '2천원' 입장료 소송 승소

담양군의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입장료 정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30일 담양군과 광주지법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성홍)는 A씨 등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담양군은 2005년 옛 국도 25호선 메타세쿼이아길 2.1km의 관리권을 정부로부터 넘겨받아 2012년부터 성인 1000원 입

장료를 받았고 2015년부터는 성인 2000원으로 인상했다. A씨 등은 무료로 다닐 수 있었던 가로수길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이용료를 받는 것은 사실상 도로 통행료를 인당 2000원씩 받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며 지난해 5월 3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앞서 화해 권고를 통해 기존 2000원인 입장료를 1000원으로 낮추고 장

거적으로는 개별 시설마다 입장료를 징수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담양군은 "메타랜드 조성을 위해 국비 200억원 등 480억원의 재정이 투입됐고 20명이 넘는 관리 인원에 대한 고정비용도 수억 원이다. 개별 입장료 징수는 오히려 이용객 부담을 늘릴 수 있고 인허가 담양군의 적자가 커질 것"이라며 이의 신청을 했다. A씨 등도 화해 결정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법원 2심도 "대학 시간강사, 퇴직금 지급 대상"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남해광)는 "퇴직한 강사 A씨가 광주의 모 대학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대학법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 강의의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자료수집·수강생 평가·학사행정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학교 측도 강사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전임교원(교수) 사례를 볼 때, A씨가 오랫동안 비슷한 과목을 강의했고 다른 대학에서도 유사한 강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담당 강의시간만 근로시

간으로 인정해 A씨를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대학 교양학부에서 2001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3년 6개월간 시간강사로 근무했다. A씨는 대학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학교 측이 퇴직금 청구액 2065만원 중 188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A씨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평균임금을 일 4만6565원, 통상임금을 일 4만4625원으로 보고 이 중 더 큰 금액인 평균임금을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삼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통상임금을 일 5만1000원으로 보고 A씨가 최초로 청구했던 2065만원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차량 절도 추돌사고 20대女 "다이어트 약 때문에 기억 안나"

○··흡연 택시를 몰다 차량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다이어트약 과다 복용 때문에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 경찰이 사실 확인 중. ○··지난 3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절도 혐의로 입건된 A(여·28)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 15분께 광주시 광산구의 한 택시승강장에서 불안감 등 이상증세를 보이며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뒤, 택시기

사 A씨를 진정시키려 운전석에서 내리는 틈을 타 택시를 훔쳐 30분간 주행하다 승합차를 들이받고 멈췄다는 것. ○··A씨는 경찰에서 "최근 다이어트약을 복용하며 건강증과 환각 등에 시달렸다.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 분석을 통해 해당 다이어트 약물에 항정신성 성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증입니다
매매대상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곤충사육장 + 태양광
버섯재배사 + 태양광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